“전북자치도 금고 운영방식 개선을”

김성수 도의회 예결위원장,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액 불균형 심화”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타 시·도의 경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1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북자치도처럼 금고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액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주요 문제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도 협력사업비는 총 108억원으로, 이 중 농협은행(1금고)이 75억원, 전북은행(2금고)이 33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2금고로 집중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1금고보다 2금고가 더 큰 금융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1금고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고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1금고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거나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합 관리하며 협력사업비의 활용 극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재난관리기금, 농림수산발전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1금고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의 금고 운영 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향후 2026년 도금고 지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춘향전 캐릭터 선발대회 추진하자”

남원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2030년 100주년을 앞둔 춘향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춘향제는 94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춘향의 고장’이라는 브랜드가치 확립에 기여했으나, 현재의 춘향제는 춘향선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춘향전 속 다양한 캐릭터들이 가진 이야기와 매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춘향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대회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춘향제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 첫째, 춘향전 속 주요 인물들을 활용한 연속형 선발대회 추진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 선발대회와 연계한 특산물 홍보 전략 추진 필요를 강조했다.

또한, 축제 기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형 마켓을 확대해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임실 치즈축제등 인근 지역의 성공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의회 농복환위, 경북 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지난 10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및 방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 및 권요안 부위원장, 이정린 의원, 오현숙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경북도청 산림병해충 팀장 및 경주시청 산림방제팀장 등이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심각 지역 및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방제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일대 피해지(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258-15)와 방제 현장(경주시 석현로 123)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방제 기술을 점검했다.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예찰과 맞춤형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관계자들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 및 구속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尹 석방, 내란 수괴에 대한 사법 폭동”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윤석열 파면 · 구속 촉구 단식농성 돌입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김용만)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 및 구속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내란 수괴에 대한 사법 폭동”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회견에서 “내란 부역자들은 구속되었는데, 정작 주범인 윤석열이 거리로 풀려났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윤석열을 만든 건 국민”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보하며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해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취소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윤석열의 석방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그가 파면되는 그날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사법·검찰 폭동 규탄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즉각 파면 및 구속 등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 “尹 탄핵 신속 선고해야”

헌재에 촉구…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가 혼란 조속 마무리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9명이 11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 지연으로 국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행위를 했음에도 석방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 만에 결론이 났다”며 “이미 충분한 변론과 심리가 끝난 만큼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 미뤄지면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며, 국회도 정부와 원활한 협력이 어려워 주요 입법과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국가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영호(교육위원장), 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 박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9명의 국회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양계업계 현안 청취…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민주 이원택 의원, 대한양계협회 방문… 제도 개선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0일 대한양계협회를 방문해 양계업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서초구 축산회관에서 열린 대한양계협회 간담회에는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윤금노 부회장, 고유돈 부회장, 정승현 부회장, 김동진 전무 등이 참석해 △계열화 농가의 농·축협 조합원 가입 허용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처벌 규정 완화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소득손실 보상 기준 현실화 △병아리 위탁 부화 판매 시 부가세 면세 △동물복지 계란의 기준 명확화 등 주요 현안을 제기했다.

이원택 의원은 “양계업계의 어려움은 축산업 전체와 국민 식생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 발생 시 농가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상 기준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향토지식재산 세계화”

전북 백년포럼서… “관련 자원 · 기관 도내에 풍부해 글로컬 전략 추진 최적지”

도내 향토지식재산을 적극 발굴, 육성하는 글로컬 전략을 통해 전북을 ‘한국을 선도하는 K-지식문화수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1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향토지식재산의 새로운 글로컬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29강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로 나선 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의 황종환 이사장은 “저성장, 고령화, 지역소멸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자원으로서 향토지식재산의 글로컬 가치를 재발견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토지식재산은 현대의 개별 기술, 디자인, 저작창작물과는 달리, 이미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자연소재, 지식, 기술, 명칭, 문화로서 구현된 지식유산으로서, 별도의 R&D나 창작행위가 수반되지 않기에 최소의 노력과 시간으로 지방화와 세계화를 연결하는 글로컬 전략의 핵심이 된다.

황종환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향토지식재산은 일제치하에서 단절, 왜곡을 겪고 해방 후 산업추격시대에도 무관심과 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제대로 된 연구나 가치인식이 전혀 없었던 게 현실적인 평가”라고 지적하며, 전북이 향토지식재산 발굴과 연구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K-지식문화수도를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전북향토지식재산을 글로컬화 할 수 있는 천년전주문화를 비롯, 국립무형유산원, 황실문화재단, 식품클러스터, 태권도원 등 풍부한 자원과 주요 기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23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시행한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포럼’을 전주에서 개최하고 2024년 국내 최초로 향토지식재산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토지식재산의 글로컬 전략 추진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황종환 이사장은 전북향토지식재산 주요 글로컬 사업 사례로 △전주 비빔밥(음식) 세계화, △무주 태권도(스포츠문화) 세계화, △순창, 고창, 정읍, 익산 발효(그린 바이오) 세계화, △전주 한옥, 소목(공예), 한지 세계화, △남원 아시아 청년문화(칠월칠석) 세계화, △군산-김제 글로벌 항공(물류, 제조, 관광, 교육) 클러스터 조성, △기타 전북 기초지자체 주요 향토지식재산 통합산업생태계 구축(40개)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연구원 역시 기초지자체 연구 지원을 통해 각 지역 향토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대광법 개정안, 소위 문턱 넘었다

민주 이춘석 의원 “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

전북 소외의 근원으로 지적됐던 대광법 개정안이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이춘석 의원은 여러 차례 배수진을 치고 대광법의 국토위 통과를 약속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대광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 통과도 없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아울러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문진석 간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교통소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소위 통과를 끌어냈다. 전북의 4선 중진 국회의원인 이춘석 의원의 정치력이 빛이 발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라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간 교류 활성화

민주 정동영 · 김기태 지역위원장, 전북-경남 지역협력 협약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지역위원장)과 김기태 민주당 경남도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지역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북 전주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열렸다. 정 의원과 김 위원장은 양 지역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방문과 교류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정동영 의원과 협력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전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지역주의 타파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두 지역위원회가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호림 산청군의원, 김홍섭·신미정 거창군의원, 서영재 함양군의원, 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김옥기 기자